



현대차 하청 이수기업, 노동자 40여 명 해고 논란 9월 말 계약종료 통보 ... 금속노조 “원청이 고용승계 해결해야”

금속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집단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 현대차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와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은 현대차 원청이 이수기업 정리하고 문제 해결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수기업이 해운 공정이 계속 필요한데도 현대차 원청은 9월 말로 이수기업 노동자 38명을 쫓아내려 한다”라며 “통상 업체 폐업 시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를 하는데, 지금 이수기업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 1차 사내하청업체인 이수기업은 지난달 28일 폐업을 공고했다. 9월 30일자로 사업을 정리하고, 이날 근로계약 관계도 종료한다는 내용. 이수기업은 현대차 수출선적부 차

량 이송 업무를 한다.

허원 부위원장은 “현대차 원청이 나서서 이수기업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옳은데, 오히려 현대차와 무관한 일이라며 발뺌한다”라며 “현대차에서 현대차를 만져온 노동자들 문제다. 당연히 상관있고, 또 필요한 공정이 다. 같은 공정의 다른 업체와 통합해서 고용승계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수기업 소속 안미숙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업체 폐업 등으로 오랜 시간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어려움을 겪으며 현대차에서 일해 왔다”라며 “지금까진 업체가 없어져도 고용승계는 계속됐는데 이제 완전히 일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막막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미숙 조합원은 “원청은 이수기업 상황일 뿐이라고 우기는데, 현대차에서 업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며 “이수

기업 노동자들이 연이어 불법과전(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기자 업체 폐업 얘기가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원청은 정리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오전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이수기업 정리하고 규탄 선전전을 진행했다. 오전 6시 35분께 사측 관리자들과 경비대가 들이닥쳐 지회 현수막과 앰프를 빼앗았다.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바닥으로 밀쳤고, 부상자가 생겼다. 사측 폭행은 다음 날인 20일에도 발생했다.

안미숙 조합원은 “현대차 원청이 이수기업 정리해고를 만들고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해고 철회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불법과전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커녕 해고하고 폭력 쓰는 현대차 자본에 맞서 온전한 고용승계 꼭 쟁취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조선업 상생협약 1년? 하청노동자 현실 더 나빠져” 임금체불·고용불안 여전 ... 금속노조 “다단계 고용구조 개선해야”

금속노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 현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조선업 상생 협약 생기고 1년이 훌쩍 지났지만 하청노동자들 입장에선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다. 다단계 하청만 더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HD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 5사원·하청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당시 정부는 임금체불을 막겠다며 조선업 상생 협약에 에스스로 제도 도입을 넣었다. 에스스로는 조선소 원청이 기성금 중인 건비를 별도 계좌에 예치한 뒤 지정한 날짜가 되면 금융기관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이를 지급하는 제도다. 실제로 임금 체불 해결 효과가 나타났을까.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에스스로 제도 허점도 많고 임금 체불, 4대 보험 미납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입을 모았다. 허원 부위원장은 “정부가 홍보하는 내용과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조선업 초호황에도 원청은 하청 업체 기성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라며 “그 탓에 여전히 업체 폐업이 잦고 업체 폐업은 결국 하청노동자 임금체불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김형수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최근 발생한 한화오션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설명하며 “한화오션 같은 대형 조선소에서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야간작업을 시켰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9일 밤 9시58분께 경남 거제 한화오션 비정규직 노동자가 32m 높이 선박에서 용접 작업 도중 떨어져 사망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원청이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에 대비한 안전 조치도 없이 작업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최민수 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장은 “중대재해, 임금 체불, 고용불안 등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없애려면 조선소 다단계 하청구조 해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민수 지회장은 “또 조선소는 하청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꼬집었다.

최민수 전남조선하청지회장은 “정부는 조선업 상생협약으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기대한 다지만 실제로는 물량팀만 늘어나고 있을 뿐”이라며 “다단계 하청을 없애고 상용직 중심으로 고용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위험하고 불안한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조선업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의견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의견서에 ▲다단계 하청 폐지 ▲상용직 노동자 중심으로 고용구조 개편 ▲원청·하청노조 단체교섭 법제화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담았다.